

막 오른 선거제 개편... ‘비례성 강화·의원정수 확대’ 쟁점

김진표 의장 임기내 개혁 표명
23일 전원위 구성안 의결 예정
與 ‘중대선거구제’ 도입 긍정적
野 ‘소선거구제’ 방식 유지 입장

국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여 남기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섰다.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 핵심은 ‘비례성 강화’,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으로 꼽힌다. 이들 쟁점에 대한 여야 정치권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 299명 전체가 참여해 안전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하는 회의체다. 선거제 개편안은 각 의원마다 입장이 갈리는 만큼 전원위에서 토론한 뒤 결론 내리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기 내 선거제 개혁 의지를 표명한 데 따라 성사된 전원위에서는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



조해진(왼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표제 등 세 가지 안전에 대해 토론했다. 이들 안전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가 지난 17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전원위에 올리기로 의결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안이 통과되면 여야 의원 299명은 오는 27일부터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선거제 개편안을 위한 전원위는 2주간 5~6차례 열리며, 이곳에서 논의한 결과물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전원위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회

의에서 정개혁위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여야는 현행 소선거구·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다양한 방식의 선거제를 제안했다. 선거제에 따라 국회의원 유불리가 갈리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논의 끝에 정개혁위에서 의결한 세 가지 안전으로 정리했다.

먼저 1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만 변경하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의석수를

결정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은 먼저 전국을 6곳으로 구분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게 된다. 이어 추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또 한 번 나눈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안한 방식으로는 비례대표 의원 수가 현행(47명)보다 50명 늘어나 총 97명이 된다.

2안인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안과 유사하다. 대신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비례대표로 배분해주는 ‘연동형’ 방식 도입이 다르다. 다만 정당 득표율 반영 비율은 기존 연동형보다 다소 낮추게 된다.

3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제가 달라지는 게 핵심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의 경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비례대표는 1안과 같다. 다만 1~2안과 달리 현행 국회의원 수(300명)를 유지한다.

한편 이들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여야 입장은 저마다 다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

사에서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편이다. 비례대표제는 현행 준연동형 방식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21대 총선 당시 도입한 준연동제로 위성정당이 탄생된 데 따른 비판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의원 선출에서 소선거구제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선출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선거제 개편안 관련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설문조사 내용에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는 의견이 조금 더 나왔다”고 했다.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를 주장하는 만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개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관련 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의원수가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특권이 적어진다”며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첫 고위당정협의회 참석

“근로제 개편 등 당정대 정책 소통 강화”

가뭇대책, 부산엑스포 유치 등 논의
한일정상회담 성과 강조... 野 공세 대응

새로이 출범한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같은 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야당의 ‘승일 외교’ 공세에 맞섰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한일정상회담 후속 정책, 남부 지방 가뭇대책,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에 참석해 “민생 문제 해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 팀워크를 잘 살려야 한다”며 “정책 입안 발표 이전에 당·정·대 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주 69시간’ 논란에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고용노동부에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 보완점 검토를 지시한 뒤 ‘연장 근로를 해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선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MZ 노동조합 의견 수렴 차원에서 관련 토론회도 가졌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 2년차인 올해는 주요 개혁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를 본격 실행하고 성과를 가시화해



김기현(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나가야 하는 한해”라며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과제·현안마다 보다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최근 경제를 보면 작년부터 우려했던 복합위기가 현실로 다가오는 거 같아서 걱정이 많다. 서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당, 정부, 대통령실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특히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당과 사전협의의 예상되는 부작용을 거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후속 조치 마련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일본과의 관계가 새로운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민께 적극 홍보하고 우리의 진정성이 국민께 알려질 수 있도록 당정이 모든 역량을 총동

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비판하는 데 대해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다. 마치 구한말 쇄국 정책을 고집하며 세계 정세 흐름을 무시한 채 국내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던 무능한 국가 지도자들이 나라를 망쳤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또한 한일정상회담 당시 ▲반도체 3대 품목 수출규제 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회복 등 주요 결과에 대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하는 필수적인 방향”이라며 평가했다.

한편 당과 정부는 남부지방 가뭇 관련 장기적이고 항구적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오는 4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점검을 앞두고도 당과 정부가 철저한 준비와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영훈 기자

“‘승일외교’ 비판, 과도한 정쟁화 우려”

대통령실尹 대통령 日 순방 브리핑
“국민·미래세대 위한 생산적 논의 해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일본 순방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승일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정쟁화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이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순방 기간 중에, 어제오늘의 야당 비판을 보면 아쉽거나 실망스러운 게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큰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 측에서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일본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좀 더 지성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국민 이익과 미래세대 이익을 위해 비판한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윤 대통령의 대일 ‘굴종외교’는 이제 천일외교를 넘어 ‘승일외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며 “일본에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버린 것도 부족해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김진표, 유럽·중동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국회의장)

9박 11일간 순방 일정 마무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튀르키예·이탈리아·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공식 방문 후 귀국했다. 김 의장은 9박 11일 일정을 소화하며 각국 의회 정상, 정치 수반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 경제협력 강화, 2030 부산세계엑스포 지지 요청 등 관련 활동을 전개했다.

19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집을 비롯해 각국 특색에 맞는 경제협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관광 수요와 관련 해외여행을 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교민사회의 경제 회복 문제를 챙기는 등의 행보도 이뤄졌다.

/박정익 기자